타인 위치정보 무단추적 처벌 강화 근거 마련

이원택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8일 불법 위치정보 조회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발전 수문장 역할 '톡톡'

신영대 의원, 군산 국가산단 환경조성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필요성 역설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2일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전북 군산 발전 지킴이를 자처하는 신영대 의원은 2일차 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시도에 맞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산단의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청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예산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북 동부산악지역의 이동편의 증진 및 관광객 유치에 절실한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예산을 감액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는 강력히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 기존 도로나 임도를 활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오히려 야당 위원들도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동의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겠다"면서도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모두의 경제포럼 준비위원회는 18일 구스토나인 별관에서 공동대표단과 회원 100여 명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지로위원장), 서난이 전주시의원, 이인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조지훈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경제포럼 창립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신호탄' 쏘다

'모두의 경제포럼' 창립식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상임고문을 맡은 '모두의 경제포럼'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8일 모두의 경제포럼 준비위원회는 구스토나인 별관에서 공동대표단과 회원 100여 명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성준 의원(을지로위원장), 이재명 선대위 청년 플랫폼 대표단을 맡은 서난이 전주시의원, 이인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조지훈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경제포럼 창립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경제포럼'은 지역 청년CEO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더 늦기 전에 잘나가는 전주를 위해 지역경제가 지속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대표단으로 직접 나서 기획·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유력 정치인들의 참석 배경에는 '모두의 경제포럼'이 지역의 새로운 아젠다를 이끄는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임고문을 맡은 조지훈 전 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선언으로 문을 연 창립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전도사'인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인사말 및 기조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이런 때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포럼이 만들어져 반갑다"며 "현재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과 기업까지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만큼 이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국토를 고르게 사용하는 면에서도 이득, 이제는 메가시티 기반의 다극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즉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 현장에 있는 청년기업가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이렇게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더욱이 추진력 있는 조지훈 전 경진원장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하니, 서로 힘을 모아 부동산, 지방 낙후 등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알차게 준비한 만큼 의미 있는 포럼으로 발전해 전북도, 전주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축하 영상을 통해 "청년경제인이 중심이 된 젊은 포럼으로 전주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며 포럼의 출발을 응원했다.

창립식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는 한동숭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이 나섰으며, 조승혁 (사)글로벌청년수출협회 회장이 좌장으로, 청년CEO 3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함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눈길을 끌었다.

조지훈 상임고문은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며 "여기에 전주한옥마을에 쏟은 정성과 월드컵경기장에 투입된 예산 및 지원책만큼 지역 경제와 산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 이끌어내

윤준병 의원, 축산농장 관리사 숙소 인정 고용부 지침 개정 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으며,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했다.

/유호상기자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 역사성 재고찰

황의탁 도의원, 정책세미나 열어… "문화재지정 계기, 관광자원화를"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의 역사성 및 문화성 재고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을 '한국고유사상이라 할 수 있는 삼신관에 비춰 살펴봐야한다'는 신시문화연구원 이찬구 박사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재로 지정되게 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 전북도 문화유산과 이민석 학예사의 설명과 함께, 중앙대 송화섭 교수, 역사 문화 칼럼니스트 조옥구씨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전북도에는 약 20여건 정도의 마애불이 있는데,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은 마애불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무주지역 산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는 마애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희소가치가 높다.

황의탁 의원은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 무주 대불리 불상이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무주군과 전북도가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윤지홍 남원시의원, 민주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선정

남원시의회 윤지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1급)에 선정됐다.

윤지홍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남원시가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중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